

# KIPEC BRIEFS

## 미국의회 주요동향



### 목차

---

1. 의회 일정 및 소식 .....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	6
3.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부과.....	8
4. 댄 설리번 상원의원 국가안보보좌관 초대 라운드테이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11
5. [분석보고서] 미 외교정책 우선순위 논쟁: 유럽 vs. 인태 지역.....	14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 4월 의회 주요 소식



###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인준

2025년 4월 8일(화),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으로 인준하였다.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콜비는 국방부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에 공식 임명되었다. 해당 직책은 국방 정책의 수립 및 조율을 총괄하며,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인준안은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만은

예외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매코널 의원은 콜비가 주장해온 인도-태평양 우선주의가 우크라이나, 유럽,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유럽과 중동을 경시하고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하는 것은 지정학적 자해이며, 이는 미국의 동맹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고 적국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세 명의 중도 성향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잭 리드(민주·로드 아일랜드),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앨리사 슬로킨(민주·미시간)으로 모두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이다. 세 의원 모두 스윙스테이트 출신이다.

콜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무부, 국가정보국장실 등에서 전략 기획 및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8년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전략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미국의 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테러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에서 탈피해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특히, 콜비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경고해 왔으며, 미국이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다 많은 전략 자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지원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방어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SAVE Act 하원의결 및 향후전망

2025년 4월 10일(목), 미국 하원은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SAVE Act)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선거 관련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거에서의 부정 투표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SAVE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신규 유권자 등록 또는 등록정보 갱신 시, 유권자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여권, 출생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해당 요건은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자는 관할 선거 사무소에 직접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본 법안이 미국 시민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선거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실제로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 특히 결혼 후 이름 변경 경험이 있는 여성, 저소득층, 시골 거주자들에게는 본 법안이 투표 접근성의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추방 등의 제재가 가능한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며,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바 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다만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행정부 및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즉시 시행되며, 모든 신규 유권자 등록 신청과 등록정보 갱신 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일부 주정부가 연방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아 법 시행에 반발하거나,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 하원 예산결의안 통과 및 향후 영향

2025년 4월 10일, 미국 하원은 예산결의안(H.Con.Res.14)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이미 2025년 4월 5일(토),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된 바 있다. 본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기조인 대규모 감세, 복지 축소, 국경 보안 강화를 반영하며,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 개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결의안은 향후 10년간 최대 4.5조 달러(약 6,840조원) 규모의 감세를 허용하고, 연방정부 지출은 최소 1.5조 달러(약 2,160조원) 삭감을 목표로 한다. 감세 항목에는 2017년 제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Tax Cuts and Jobs Act) 연장 및 신규 감세 조치가 포함되며,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등)의 지출 삭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4조 달러(약 5,760조 원)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방 및 국경 보안 예산 확대도 제시하고 있다. 국방 예산은 1,500억 달러(약 216조 원), 국경 보안 관련 예산은 1,100억 달러(약 158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통과로 의회는 예산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고 단순 과반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이견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관세 수입으로 보전하려는 계획은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축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리 부커, 상원 최장 연설 기록

2025년 4월 1일(화),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상원 본회의장에서 25시간 5분에 걸친 연설을 이어가며 상원 역사상 최장 시간 연설 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는 1957년 스트롬 서먼드(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상원의원이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반대하며 세운 기존 기록(24시간 18분)을 경신한 것이다. 부커 의원의 연설은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나, 상원의 다음 회기 시작 시점인 정오를 넘겨 회의 일정에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하였다.

부커 의원의 연설은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연방 지출 삭감안 및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공화당의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삭감 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연설 도중, 부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는 역사적 맥락에서 스트롬 서먼드 전 의원의 분리주의 옹호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와 달리 이번 연설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부커 의원은 민주당 상원 지도부 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로서, 당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존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적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동료 의원인 피터 웰치(민주·버몬트)는 “우리는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며,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치적 파급력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에셜론 인사이트(Echelon Insights)가 2025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028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가상조사에서, 부커 의원은 11%의 지지를 얻으며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조사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정치적 존재감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1위는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으로 28%의

지지를 얻었으나,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부커 의원의 이례적인 장시간 연설은 단순한 정책 반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대선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이는 민주당 내 전략적 재정비와 반트럼프 연대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며 향후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대통령 비상관세 권한 제한 법안 (H.R.2888)	발의	Linda T. Sanchez (민-캘리포니아) (2025. 4. 10.)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통해 부과된 특정 관세 조치를 종료하고, 향후 유사한 관세 부과 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단독 무역 정책 집행 권한을 제한하고, 무역 관련 결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 및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님.
유권자 시민권 확인 법안 (H.R.22)	하원통과 (2025. 4. 10.)	Chip Roy (공-텍사스) (2025. 1. 3.)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법안. 각 주는 시민권을 증빙하는 적절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도록 요구받게 됨. 본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미국 시민만이 연방선거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군사기지 인근 외국인 제한법안 (H.R.2754)	발의	Jodey C. Arrington (공-텍사스) (2025. 4. 9.)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연계되어 있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외국인이 미국 내 군사시설 또는 군사 항공 관련 부지 인근의 부동산을 구매, 임대하려는 경우,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가 해당거래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법안
2025년 무역 검토 법안 (S.1272)	발의	Maria Cantwell (민-워싱턴) (2025. 4. 3.)	무역 정책에 대한 의회의 참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음.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의회는 해당 조치에 대해 최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p>미국 제조업 장려 세계 지원법안 (H.R.2652)</p>	<p>발의</p>	<p>Chip Roy (공-텍사스) (2025. 4. 3.)</p>	<p>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운영 중인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조세 중심의 지원정책임. 주요 내용으로는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국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매각 이익의 비과세, 자산 투자에 대한 즉시 전액 비용 처리의 영구화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함.</p>
---	-----------	---	--

# 미국의회조사국(CRS) 리포트 요지

##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사진출처: Newsweek)

2025년 3월 26일(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4월 3일부터 대부분의 무역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해당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하에 거래되는 차량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쿼터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관세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이번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주요 자동차 무역국과의 통상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 권한의 범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요배경

2024년, 미국은 총 810만대의 자동차(2,488억 달러 규모)를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대한민국, 캐나다 등 주요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입하였다(표1 참조). 이들 다섯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수량 기준으로 전체 차량 수입의 96%, 총 금액 기준으로는 94%를 차지하였다. 2023년 기준,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사업장에 총 1,09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생산된 총 1,030만대의 차량 중 약 490만대를 생산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은 미국이 체결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승용차에 대해 2.5% 최혜국(MFN) 관세, 경트럭에는 25%의 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자동차 무역에 대해 대부분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KORUS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경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는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일본 및 유럽연합(EU)과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78년 차량에 대한 모든 수입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EU는 승용차에 대해 10%의 MFN 관세, 일부 경트럭에 대해서는 22%의 MFN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별도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해당 합의문에는 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정 수량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예외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던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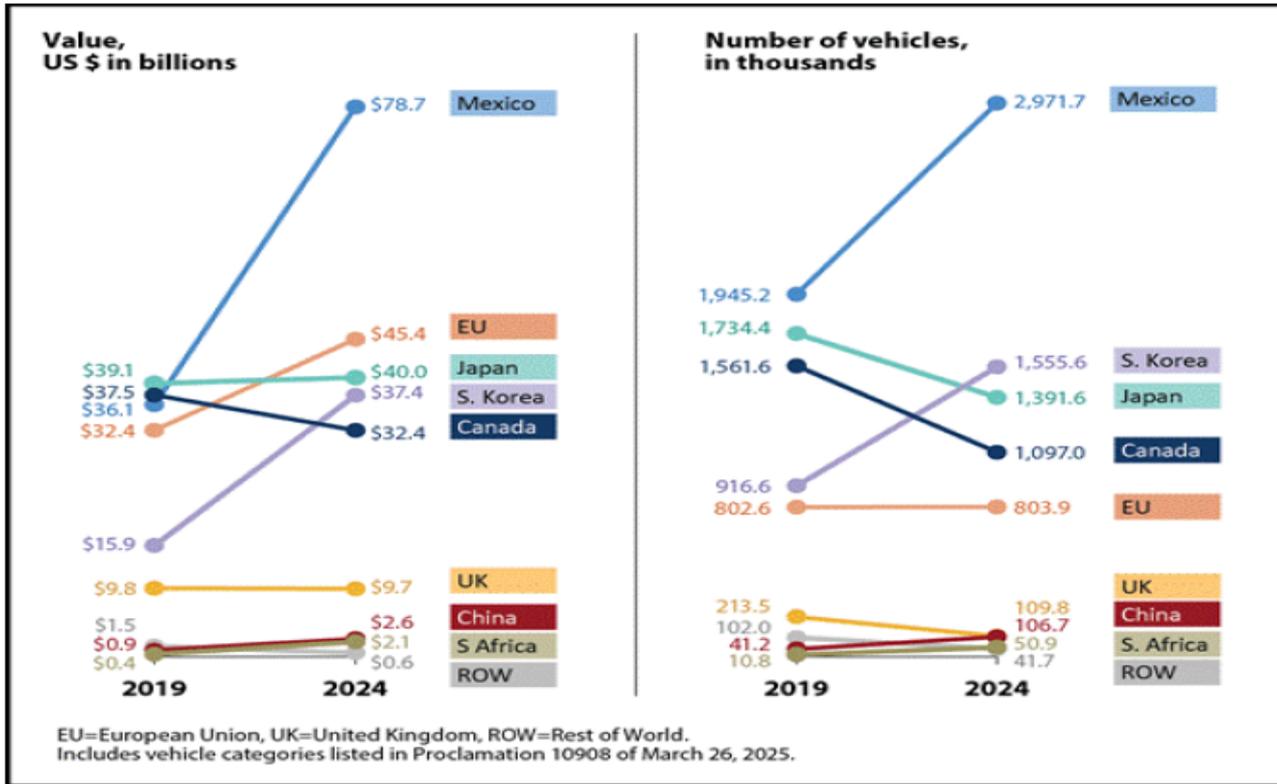


표1. 차량 수입 금액 및 수량 (2019-2024)  
(출처: CRS, 미국인구조사국 데이터 기반, 2025년 4월 기준 무역데이터모니터에서 제공)

### 2025년 3월 대통령 공식 발표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기간 동안 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나 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2025년 3월 26일, 대통령 공식 발표문에서는 당시 USTR이 진행한 협상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상정된 유형의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2019년 상무부 보고서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근거로는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절반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생산 점유율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USMCA와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의 개정이 충분한 긍정적이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입법 등 기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유도된 투자 또한 실효성이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 공식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① 2025년 4월 3일부터 모든 차량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며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산 부품 비율에 따라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 ② 2025년 5월 3일부터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에는 면세 혜택을 적용하되, 행정부가 비미국산 부품의 가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적용된다.
- ③ 대통령 공식 발표문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적인 자동차 부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관세는 다른 세금(예: 최혜국 관세)과는 별도로 부과되며, 2025년 4월 3일부터 대부분의 상품과 거래국에 대해 10%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국가별 관세는 유예상태이다. 이번 공식 발표문에는 USMCA 별도 합의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해 해외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줄이고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는 이러한 자동차 관세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 및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이 관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캐나다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으며, 이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다.

## 국회의 주요 쟁점

현재 미국 의회는 제232조 자동차 관세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자동차 관세가 세수를 늘리고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무역 권한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H.R.735). 반면,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가 무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1272/H.R.2665, H.R.1903). 또한 일부 의원들은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한 면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면제 조치가 관세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4월 17일 CRS가 발간한 *Section 232 Automotive Tariffs: Issues for Congress* (총4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

### 월터 로만, 댄 설리번 (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 안보보좌관

**라운드테이블 배경 및 연사 소개:** 한미의회교류센터는 2025.5.7. (수) 월터 로만 (Walter Lohman) 댄 설리번 (Dan Sullivan, 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 국가안보보좌관을 초청해 알래스카주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관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월터 로만 보좌관은 상원의원실 근무 직전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센터 국장을 맡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 행정부로부터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산 LNG 구매계약을 체결하라는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산 LNG 구매계약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무역 협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래 라운드테이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사진: KIPEC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중인 월터 로만 (댄 설리번 상원의원 국가안보보좌관)

#### 알래스카주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및 진전 소개:

1960-1970년대 알래스카주 오일 파이프라인 공사 당시 천연가스가 발견됐다. 이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남쪽으로 이송하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파이프라인 건설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수출 관련 허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총 35개의 허가를 받았으며 필요한 모든 허가가 완료됐다. 글렌파른(Glenfarne)이 본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업체로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래스카주가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나 알래스카주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여하는 바는 없으며 도입계약(Offtake Agreement)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될 것이다.

알래스카주 천연가스의 주요 소비자는 우선적으로 알래스카 주민들이다. 알래스카주 남부 쿡 인렛(Cook Inlet: 알래스카만의 후미)의 천연가스는 거의 대부분 고갈되었으며 따라서 지난 30년간 일본에 지속적인 천연가스 수출 이후 현재로는 더 이상의 수출이 중단됐다. 알래스카 주내 천연가스 공급의 중요성은 외부 시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내정치적으로 파이프라인 개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 개발은 LNG 처리 및 수출 시설을 건설해 아시아로의 수출이다.

현재까지 가장 의미 있는 실질적인 상업적 진전은 대만 정부가 연간 6만톤의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구매하기로 한 도입계약이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 연간 20만톤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생산이 예측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도입계약에 참가한다면 프로젝트 개발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비용은 현재 4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아시아에 저렴한 가격에 알래스카산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물론 중국에도 알래스카산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이 미국산 LNG에 15%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의 도입계약에 의존한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는다.

### 트럼프 대통령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관심 및 우선순위: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진행해왔다. 임기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주와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한 행정명령을 선포해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를 돕도록 했다. 또한 2025.4.2. (수)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이후 한국, 일본, 대만 등과 무역 협상이 시작됐으며, 그 대화의 일부로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포함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훌륭한 사업적 제안이며 어느 누구를 강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천연가스의 관점에서든 좋은 제안이지만 한국이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 해소 관점에서든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약 50만톤의 철강이 필요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 내에서 철강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한국(포스코)과 일본(일본제철)이 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미 당시 두 정상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이유로는 미국산 에너지 생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알래스카주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기회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비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업체인 글렌판(Glenfarne)이 잠재적인 공급자들과의 협약을 이뤄냈으며 이 프로젝트는 북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LNG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진: 댄 설리번 상원의원실 제공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브로셔 (링크: [https://www.sullivan.senate.gov/imo/media/doc/aklng\\_01072\\_5.pdf](https://www.sullivan.senate.gov/imo/media/doc/aklng_01072_5.pdf))

###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

이 라운드테이블이 한국 국회 관계자들에게 배포될 것이라고 했으니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win-win) 계약이다. 우리는 한국에게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강요할 의지도 없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알래스카산 LNG는 지난 30년간 일본으로의 운송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알래스카-일본 운송 루트는 사실상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미 해군이 그 운송로를 보장한다. 카타르산 LNG와 같이 전략적 요충지 (Chokepoint)를 거치지도 않아서 지정학적 위기시 LNG 운송이 위협받을 일도 없다. 러시아산 LNG는 말할 것도 없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좋은 딜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미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진행중인 관세 협상과의 연계성

현재 워싱턴 DC에서 진행중인 무역/관세 협상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관세 협상을 해당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접근법을 취해왔다.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연계성은 철강산업 관련이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 철강업체가 철강 공급을 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산 철강에 부과된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도 이 프로젝트 관련 필요한 철강에 (관세로 인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경제성

나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관련 협상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알래스카 주지사가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한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한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국의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참여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협의 중 하나인 도입계약(Offtake Agreement)이다.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경제성은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도 경제성 관련 여러 분석을 해왔다. 특히 기존 파이프라인 옆에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건설해야 했던 1기 파이프라인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다. 천연가스 공급가격 관련해서는 일본측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청해도 좋다. 알래스카주에 한국 국회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다.

### 공화당-민주당 정부 정책결정 연속성

미국 정부가 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계약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2028년까지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부처 장관들에게 압력을 주고 있다. 물론 2028년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성되더라도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연속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초당적 합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지금까지 총 35개의 관련 허가 중 약 1/3은 민주당 행정부에서 승인됐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주일미국대사를 역임한 정치인 출신 람 임마누엘(Rahm Emanuel)도 매우 적극적으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홍보해왔다. 이름을 언급할수는 없지만 민주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내 LNG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 인태지역인가?



2025.2.28. 트럼프-젤렌스키 백악관 정상회담  
(사진: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

### Executive Summary:

2025.2.28. (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정삼회담을 계기로 미국 외교안보정책, 특히 탈유럽 정책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유럽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히 공화당 내 이견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쪽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므로 모든 역량을 인태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유럽에 관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3.24. (월) 애틀란틱지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가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을 실수로 시그널 (Signal) 단체채팅방에 초대해 예멘 공급 계획을 고위급 인사들과 논의한 사실을

보도<sup>1</sup>했다. 특히 공개된 채팅 내용 중 JD 밴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만이 후티 세력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유럽을 무임승차 (freeloading), 한심한 (pathetic) 등으로 표현해 미국의 탈유럽 정책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 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도 미국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유럽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24.4.24.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공포한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Ukraine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4)<sup>2</sup>은 트럼프계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 낭비 지적 및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며 반발해 처리 과정에 진통을 겪었다. 현 부통령인 JD 밴스 (공화-오하이오주) 당시 상원의원도 해당 법안이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감축을 어렵게 해 차기 행정부의 외교 공간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sup>3</sup>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민주당 과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내 이견은 2025.3.4.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sup>1</sup> Jeffrey Goldberg, "The Trump Administration Accidentally Texted Me Its War Plans," *The Atlantic*, March 24, 2025,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25/03/trump-administration-accidentally-texted-me-its-war-plans/682151/>.

<sup>2</sup> Cathy [R-WA-5 Rep. McMorris Rodgers, "H.R.815 - 118th Congress (2023-2024): Making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2024, and for Other Purposes." (2024),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815>.

<sup>3</sup> Karoun Demirjian, "Senate Passes Aid to Ukraine, but Fate Is Uncertain in a Hostile House,"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2, 2024, sec. U.S.,

<https://www.nytimes.com/2024/02/12/us/politics/senate-ukraine-aid.html>.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유럽 대 인태지역 우선순위를 둔  
주요 질의 응답:**



2025.3.4. 엘브리지 콜비 (가운데)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콜비 지명자를 소개하는 JD 밴스 미 부통령 (왼쪽).  
(사진: Kent Nishimura/Bloomberg via Getty Images)

엘브리지 콜비는 2017-2018 미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 재직 당시 2018 국가방위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작성을 주도한 바 있다. 콜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명된 미 국방부 정책차관직은 국방부의 전략적 방향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 미국의 유럽 및 인태지역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가능해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2025.2.28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이 두 정상의 공개적인 언쟁으로 실패로 끝난 후 탈유럽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식되면서 2025.3.4. 개최된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상원인준청문회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청문회장에 등장해 콜비 지명자를 소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콜비 지명자 인준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sup>4</sup>에서 청문회의 가장 쟁쟁한 주제

중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정책이라면서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의 공개적 언쟁을 보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본질의에서 콜비 지명자가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주장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되려 중국의 공격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빌 번스 前 CIA 국장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콜비 지명자는 중국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우크라이나 관련 주장은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sup>5</sup>(the need for strategic prioritization)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방위산업을 재건해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민주-로드아일랜드)는 모두발언<sup>6</sup>을 통해 콜비 지명자가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 감축과 유럽 내 미국의 역할 축소를 주장한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를 축소하자는 콜비의 과거 주장을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리드 상원 군사위 간사는 본질의에서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사실상 동맹이 와해<sup>7</sup>(essentially abandoned) 되었다고 느낀다면서 NATO 동맹이 역사상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콜비 지명자는 NATO 동맹이 아주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방위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동맹의 방위비 분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덴 설리번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본질의에서 유럽 지역 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횡포를 저지하지 않고 중동 지역 내 이란의 공격성을 억제하지 않은 채로 중국과 인태지역에만 집중해서는 성공적인

<sup>4</sup> "Stenographic Transcript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d States Senate to Consider the Nomination of Mr. Elbridge A. Colby To B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Alderson Court Reporting, March 4, 2025).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30425fulltranscript.pdf>.

<sup>5</sup> Ibid.

<sup>6</sup> Ibid.

<sup>7</sup> Ibid.

억제(deterrence)가 작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야기할 재난적인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콜비 지명자는 정치적인 신뢰성 (political credibility)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우선순위는 필요한 시기와 지역에 필요한 물품 (right stuff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sup>8</sup>을 제공할 역량을 보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키 로젠 상원의원(민주-네바다)은 본질의에서 콜비 지명자가 과거 중동 지역 내 미국의 군사적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이는 오히려 역내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콜비 지명자는 중동 지역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정책은 여러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군사력 (multi-war military)<sup>9</sup>이 없다는 현실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콜비 지명자는 2022 국가방위전략을 인용하며 미국이 4개의 적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할 역량이 없다면 현실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엘브리지 콜비 정책자관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미 외교정책 이견 관련 현지 언론 보도

워싱턴포스트<sup>10</su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레이건식 힘에 의한 평화 슬로건이 유럽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화당 내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외교 관여주의자들과 점증하는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자들 사이의 간극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통적인 레이건주의자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NATO와의 동맹을 강화하도록 물밑에서 노력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공화당 의원들이 주요 외교안보직에 지명된 이들의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sup>11</sup>은 콜비 청문회가 공화당 내 레이건식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peace-through-strength wing)하는 진영과 전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자(retreat-from-the-world faction)는 진영 사이에서 비난의 표적(lightning rod)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폴리τικο<sup>12</sup>는 콜비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화당 내 전통적인 유럽지역 관여주의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 동맹 네트워크를 수정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sup>8</sup> Ibid.

<sup>9</sup>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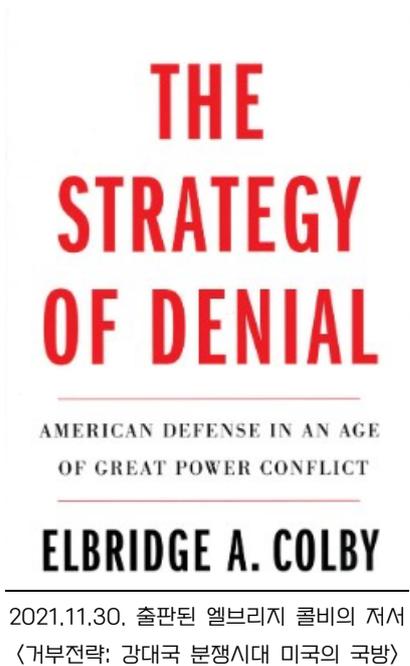
<sup>10</sup> Abigail Hauslohner, "In Trump's GOP, a Twist on Reagan's 'Peace through Strength,'" *The Washington Post*, March 6, 2025,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5/03/05/peace-through-strength-trump-reagan-republicans/>.

<sup>11</sup> The Editorial Board, "Opinion | The Debate Over Elbridge Colby," *WSJ*, March 3, 2025, sec. Opinion,

<https://www.wsj.com/opinion/the-debate-over-elbridge-colby-2017511f>.

<sup>12</sup> Connor O'Brien and Joe Gould, "Pentagon Policy Chief Hearing Highlights GOP Foreign Policy Divide," *POLITICO*, March 4, 2025,

<https://www.politico.com/news/2025/03/04/elbridge-colby-hearing-senate-ukraine-00210865>.



콜비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상원 군사위 소속 상원의원들이 지적한 콜비의 과거 주장은 2021.11.30. 출판된 저서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sup>13</sup>에 담겨있다. 아래에서 1) 인태지역과 중국과의 경쟁에 미국의 방위력을 집중, 2) 한미동맹 중요성 및 3) 우호적 핵확산에 관한 콜비의 주요 주장을 소개한다.

차별화된 신뢰성 (Differentiated Credibility)

콜비는 본 저서 제 3장 '미국의 동맹과 효과적이고 신뢰가는 방위(Alliance and Their Effective, Credible Defense)'에서 차별화된 신뢰성 (Differentiated Credibility)<sup>14</sup>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동맹 구성원은 자신의 방위와 관련된 동맹 구성원의 일반적인 신뢰성보다는 차별화된 신뢰성을 중요시한다.

<sup>13</sup> Elbridge Colby, *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1), <https://www.vlebooks.com/vleweb/product/openreader?id=none&isbn=9780300262643>.

궁극적으로 차별화된 신뢰성은 타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인태 지역 내 미국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부상<sup>15</sup> (full scale of China's rise)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동맹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는 동시에 기존의 동맹 방위 부담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별화된 신뢰성 개념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과 (특히 페르시아 걸프 너머의 지역) 같이 덜 중요한 지역에서의 관여를 줄이더라도 아시아에서는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시아 역내 중국 헤게모니를 막는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에게 미국의 차별화된 신뢰성을 유지할 고도의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싸고, 위험하고, 불쾌하더라도<sup>16</sup> (costly, risky, or distasteful),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기존 책무를 축소하더라도<sup>17</sup> (pruning commitments elsewhere) 빈틈없이 인태지역 내 동맹과의 방위 약속을 지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비는 동 저서 제 11장에서 미국의 오래된 동맹 중 하나인 한국과의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며 3가지 이유를 나열했다. 첫째, 세계의 가장 규모가 크고 선진화된 경제의 하나로 역내 중국 헤게모니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이 한국을 점령해 작전 기지로 사용할 경우 일본 방위가 몹시 복잡해진다. 셋째, 한국은 자국 방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방어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 위협이 지난 몇십년 간 감소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잠재적인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방위 준비에 국방 자원을 전용<sup>18</sup> (redirect)할 수 있다.

<sup>14</sup> Colby.  
<sup>15</sup> Colby.  
<sup>16</sup> Colby.  
<sup>17</sup> Colby.  
<sup>18</sup> Colby.

## 우호적 핵확산 (Friendly Nuclear Proliferation)

미국이 동맹국과의 방위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중국의 역내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것. 둘째,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핵확산을 용인<sup>19</sup> (tolerate)하거나 심지어는 권장<sup>20</sup> (even encourage)하는 것. 역내 제한된 핵확산이 중국의 아시아 헤게모니 장악을 어렵게 하고 반(反) 중국 연합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반(反) 중국 연합 국가들은 중국에 비해 열악한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 핵선제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대(代) 미국 대량응징보복 역량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핵 관여를 자제<sup>21</sup> (restraint)할 이유가 충분하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관여 자제를 악용해 미국의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살라미 전술을 통해 공격할 수 있다. 일본, 한국, 호주와 심지어 대만에 제한된 핵확산이 역내 국가들의 중국 대비 취약한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기 대량 사용 의지 자제를 포함한 방위 공백을 메꾸는 데 (bridge the gap)<sup>22</sup>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핵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우호적 핵확산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호적 핵확산 보다는 1) 역내 효과적인 재래식 전력 증강, 2)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sup>23</sup> (not primarily reliant on) 미국의 핵무력 지원이 훨씬 더 선호된다.

---

<sup>19</sup> Colby.

<sup>20</sup> Colby.

<sup>21</sup> Colby.

<sup>22</sup> Colby.

<sup>23</sup> Colby.

발행일 2025년 5월 12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